

보도시점 2026. 9. 9.(수) 13:30 배포 2026. 9. 9.(수) 11:00

추석명절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지원·공급 추가 확대, 바가지요금 근절 및 민생침해 대응 강화

- 농축산물 추석 할인기간 일주일 연장(9.3~9.30), 한도없이 할인혜택 제공
- 정부비축 수산물 공급 2천톤 확대(총 2만2천톤), 시중가 대비 최대 50% 낮은가격에 공급
- 추석前 범정부 합동 바가지요금 예방 특별 현장점검 및 민생침해 행위 집중조사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9일(수) 13:30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TF」를 개최하여 ❶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❷추석 바가지요금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9.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공급 확대 등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추석 대책을 통해 발표한 역대 최대 1,030억원 할인지원에 더하여, 명절기간 물가안정을 위해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할인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먼저 기존 9.3일부터 9.23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일주일 연장하여, 추석 연휴까지 포함한 9.30일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해당 기간에는 농축산물 구매시 1인당 한도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기존 추석대책: 매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만 할인적용).

수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추석 성수기 수요가 큰 대중성어종에 대한 정부 비축 공급물량 2만톤(8.24~9.27)에 더해, 명태 1,300톤, 오징어 300톤, 참조기 300톤, 마른조기 100톤 등 2천톤을 추가하여 총 공급물량(2만 2천톤)을 평시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비축 공급시 공급가 인하폭을 더욱 확대하여, 시중가 대비 최대 50% 낮은 가격(기존 최대 40%)으로 도매시장,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업계 할인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 참여 업체를 20개 업체로 확대하여, 9월중 총 4,765개 품목에 대해 최대 64%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할인 품목·할인을 등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석 3주前 제수용품 구입비용은 4인기준 평균 313,089원*으로, 전년 대비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수품 할인지원 등 물가안정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5년 1차조사) 320,370원 → ('26년 1차조사) 313,089원(△2.3%)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기간 국내관광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범부처 합동 「추석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장,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숙박업·식당·택시 쏠분야에 걸쳐 새롭게 적용되는 강화된 제재처분 기준**을 현장에 적극 안내·계도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9.16~20) 바가지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취소시 취소된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 행안부·문체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 등 참여

** 1차 위반 적발시 제재(현행→개선) : 숙박경고·개선명령 등→영업정지 5일 음식시정명령→영업정지 5일 택시경고
→자격정지 30일(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7.14), 관광진흥법 시행령(8.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9.1), 택시발전법 시행규칙(9.4))

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통해 식재료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할당관세 제도 악용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총 10개사의 5,468억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하였고 탈루세액 586억원을 추징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조사 및 엄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2810)
		담당자	주무관	송유찬	6chan@korea.kr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윤영	(044-215-2820)
		담당자	사무관	박창규	ckpark0916@korea.kr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미현	(044-215-2850)
		담당자	사무관	김종성	smilekorea@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나운	kny21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4-201-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suji i@korea.kr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미희	(051-773-5440)
		담당자	사무관	이석진	(zeriro@korea.kr)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책임자	과 장	채경아	(044-205-3902)
		담당자	사무관	정유희	(globaltravel@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성향용	(044-200-4300)
		담당자	사무관	이민호	mhl0711@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심민석	(044-203-2891)
		담당자	사무관	한미일	kaj77@korea.kr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책임자	팀 장	박준형	(044-202-2856)
		담당자	사무관	박서영	shasa@korea.kr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책임자	팀 장	강한우	(044-201-4770)
		담당자	주무관	김정은	kje41711@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4-719-2010)
		담당자	연구관	홍정미	hjm0514@korea.kr
	국세청 조사2과	책임자	과 장	장성기	(044-204-3601)
		담당자	서기관	주인규	(zik9753@nts.go.kr)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경환	(044-200-4300)
		담당자	서기관	김준희	junforu@korea.kr
	관세청 기업심사과	책임자	과 장	박재선	(042-481-7980)
		담당자	사무관	전익표	jupiter9503@korea.kr